

쿠데타로 군권 장악... 정권 찬탈 위해 광주 희생양 삼았다

전두환과 5·18

지난 1979년 12·12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의 사실상 책임자이자 헌법을 유린한 독재자로 평가받는 전두환(90)씨가 사망했다.

대한민국 11·12대 대통령이었던 전씨는 육군 사관학교 11기로 임관해 노태우·정호용씨와 함께 정권을 장악했다.

전씨 정권에서 삼청교육대가 운영돼 인권유린을 자행했고, 무고한 시민과 학생을 복한 간첩으로 몰아간 학림사건·부림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도 벌어졌다.

80년 5월 18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김대중 등 감금 광주 시민 '전두환 퇴진' 시위에 공수부대 무력 진압 무차별 학살로 민간인 167명 사망 등 수 천명 희생

재일교포 간첩 사건과 납북 어부 사건 등 조작된 간첩 사건만 수십 건으로 반공 정치를 통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했다. 김대중, 김영삼 등 야당 인사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는가 하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민주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사건들이 모두 전씨 정권에서 벌어졌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유신독재가 장기간 이어지자 1970년대 말 시민들은 격렬하게 저항했다.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거세지는 가운데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전씨는 1980년 5월 18일 0시부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신군부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을 포함한 정치인과 재야 인사들 수천 명을 감금하고 군 병력으

로 국회를 봉쇄했다.

광주지역 대학생들은 5월 18일에 '김대중 석방', '전두환 퇴진', '비상계엄 해제'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민주화 시위를 일으켰다.

신군부는 1980년 3월부터 공수부대에 진압훈련을 실시했고, 5월 초부터 군을 사전 이동 배치하고 신군부에 반발하는 시위를 진압할 준비를 마쳤다.

공수부대들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지역 대학생들과 시민들을 상대로 동원돼 무력 진압을 시작했다.

신군부 세력은 무차별하게 시민군을 진압했다. 광주에 주둔한 계엄군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시민들을 향해 다치는 대로 대검과 곤봉을 휘둘렀다. 그들은 피를 흘리며 거리에서 죽어가는 시민들을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잡아갔다.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고 집단 사살까지 벌였다. 계엄군 횡포의 진두에는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이 있었다.

10일에 걸친 5·18민주화운동에서 희생된 민간인은 155명, 부상후 사망한 시민(상이 후 사망자)은 110명이다.

또 행방불명자 81명, 부상자 2461명, 연행구금 부상자 1145명, 연행·구금자 1447명, 기타 118명 등 5517명이 신군부의 폭력으로 희생됐다.

최근 5·18진상조사위는 167명의 민간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기도 했다.

5·18 진압에 성공한 뒤 정권의 기반을 다진 전씨는 5·18을 폭동으로 몰아세우며 역사를 왜곡했다. 전두환 정권이 5·18 유족을 분열시키기 위한 '순화·비둘기계획' 등을 펼치기도 했다.

5·18 피해자와 유족, 민주 인사들이 '진실'을 얘기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거나 활동을 방해하며 인권권을 유린하기도 했다.

1989년 광주 청문회에서 5·18 진상규명을 요구

하는 국가적 요구가 거세다. 이후 1990년대 전씨는 '12·12 및 5·18' 사건으로 수사·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1980년 5월 27일 광주재진압작전(상무총정작전)의 최후진압작전에서 시위대를 사살한 행위만 '내란목적살인'으로 인정됐을 뿐, 나머지 사살 행위는 '폭도로부터 스스로 몸을 지키기 위한 자위권이었다'거나 '내란 행위에 포함되는 진압'이라는 전씨의 주장대로 무죄를 받았다.

특히 항소심에선 전씨의 '자위권 명령'이 발표 명령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 1심의 판단과 달리 전씨를 발표 명령자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12·12 및 5·18' 재판에서 무고한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다는 이유로 전씨와 노태우 씨 등 5명의 내란목적살인죄가 확정됐다.

전씨는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에서 반란(내란) 수괴·내란·내란목적살인 등 13가지의 죄목이 모두 유죄로 확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사면 복권됐다.

하지만 전씨는 5·18에 대한 살인 진압과 책임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2017년 4월 출간된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에 대해 "광주에서 양민에 대한 국군의 의도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상행위는 일어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발표 명령이란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같은 책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고해 2심이 진행중이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난 1980년 6월 2일 옛 전남매일신문 1면 머릿기사로 실린 김준태 시인의 시 '아 광주여 (오른쪽)'. 당시 신군부 언론검열관실 검열관은 120행에 달하는 긴 시 가운데 80행에 붉은펜으로 '삭제' 표시했다. 결국 120행 가운데 40행만이 지면에 실렸다.

“계엄군 만행을 신문에 신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광주일보 전신 전남매일신문 기자들 80년 5월 20일 공동사표 문 대통령 “양심·용기 있는 행동 광주시민들에 큰 위로 됐을 것”

전두환과 언론 탄압

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는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한 탄압도 서슴지 않았다. 특히 항쟁 기간 계엄군의 활동에 관한 보도나 학생들의 시위보도는 제약이 더욱 심했다. 광주일보 역시 신군부의 혹독한 언론 탄압을 겪어 야만 했다.

당시 광주에서 발행된 일간신문은 광주일보의 전신인 옛 전남일보와 옛 전남매일신문 등 두개 신문으로, 두 신문 모두 18일 오전 전남대 앞에서와 오후 도심에서 자행된 계엄군의 무차별 진압에 대해 19일자 신문에 단 한 줄도 신지 못했다.

계엄군은 전남도청 내에 설치된 전남북계엄본소 언론검열관실을 통해 5·18과 관련한 보도 일체를 불허했다.

이에 1980년 5월 20일 광주일보(옛 전남매일신문) 기자들은 '우리는 보았다 /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줄도 신지 못했다. /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 1980년 5월 20일 전남매일기자 일동'이라고 쓴 공동사표를 냈다.

당시 기자들의 공동 사표가 담긴 호외가 뿌려진 뒤, 5월 21일부터 10일 동안 두 신문의 발행이 중단되면서 호남 언론의 기능은 전면 마비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4월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3회 신문의 날' 기념 축하연에서 80년 5월 광주일보 기자들의 양심과 용기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1980년 5월 20일 옛 전남매일신문 기자들의 양심이 담긴 공동사표가 뿌려졌다"면서 "독재와 검열의 시대에 보여준 신문인의 용기 있는 행동은 고립된 광주시민들에게 뜨거운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신군부의 탄압 속에서도 1980년 6월 2일 옛 전남매일신문은 '아 광주여', 옛 전남일보는 '민주시민의 긍지, 무등산은 알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들을 게재하며 광주의 아픔을 대변했다. 옛 전남일보는 다시 발행한 6월 2일자 신문 1면에 '애독자 여러분께 알립니다. 필설로는 감히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참극을 참고 견디신 애독자 여러분 앞에 보은 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로 시작한 속간의 말씀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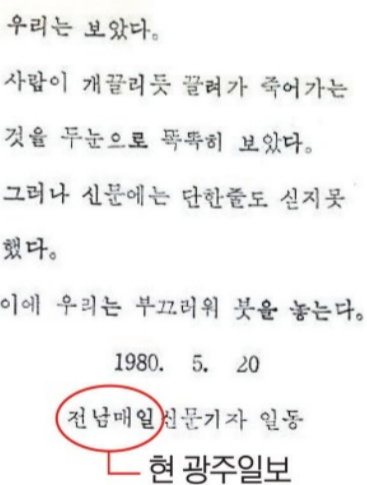
그 아래에는 '광주사태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사원 일동 명의의 7단 광고를 실어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기도 했다.

6월 3일에도 기존 8면에서 4면 만을 임시 발행했다. 2면에는 '이 아픔과 슬픔을 딛고'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5·18 이후 첫 사설이었다.

속간 3일째인 6월 4일 자부터는 8면으로 정상발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병실, 급유를 잃고 책상 위에 놓인 조화를 보고 울어버린 중학교의 개학표정 등 5·18과 관련된 모든 기사들이 검열에 의해 난도질 당했다. 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의 검열에 의미있는 부분이 지워진 채 발간되어야 했다.

이후 옛 전남일보와 옛 전남매일신문은 신군부의 언론사 통·폐합 정책에 따라 1980년 11월 29일 강제로 통합돼 제호를 '광주일보'로 하고, 12월 1일 창간호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발행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2019년 4월 4일 제 63회 신문의 날 축하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들의 양심과 용기를 보여준 사례로 언급한 1980년 5월 20일 광주일보(옛 전남매일신문) 기자들의 공동사표. <광주일보 자료 사진>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

학교폭력 예방으로 행복한 학교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요



※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이란 ?

국가 수준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으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모든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감' '의사소통' '감정조절' '자기존중감' '갈등해결'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6가지 역량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습니다.